

조세재정 Brief

K I P F I S S U E P A P E R

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

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/ dwjung@kipf.re.kr

- 01** 들어가는 글
- 02** 개념 및 현황
- 03** 의제매입세액공제
제도 효과
- 04**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

2023. 7. 4.

No.147



요약

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일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따른 다음 거래 단계에서의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, 이는 부가가치세제의 예외적 조항임
 -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목적 이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옴
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음
 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없다면, 사업자들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가격 전가의 크기가 커져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
- 다만,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인정하는 제도의 정책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함
 - 세액공제 형태가 아닌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형태의 제도 운영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정도를 낮게 조정하여 소비자 후생 변화에 큰 영향이 없다면,
 - 부가가치세제의 예외 사항을 허용하여 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대신, 중복과세, 소비자 부담 등에 대한 더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임
-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한다면,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단순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제도의 대상도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집중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

※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'정다운·정재호,『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』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22' 중 일부 내용을 발췌·요약한 것임

01

들어가는 글

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일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따른 다음 거래 단계에서의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, 이는 부가가치세제의 예외적 조항임
 - 부담한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매입세액을 의제하여 공제를 허용함으로써, 실질적으로는 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옴
 - 면세거래가 중간 거래 단계에 포함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왜곡 등을 교정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,
 - 이러한 기대 효과가 달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상황임
-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도입, 한도 및 공제율의 변화 등이 사업자들의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,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

02 개념 및 현황

1.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개념

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과세로 공급할 때, 면세된 재화에 해당하는 매입금액 일부에 대해 매입세액을 인정하는 제도임
 - 정부는 사실상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 사업자의 매입금액에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
 -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과세 사업자가 본인이 납부한 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매입세액을 다음 단계의 공급가액에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함
 - 면세사업자 역시 본인의 매입단계에서 기납부한 매입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, 다음 단계의 거래에 매입세액을 전가하려는 유인이 있음
 -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 문제, 거래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 왜곡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등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음
-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농산물, 재활용폐자원, 중고자동차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, 매입세액 공제율 및 제도 한도는 연도별로 조금씩 조정되어짐
 - 현재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업종별, 규모별 차등을 두고 있음
 - 소규모 음식점업(과표 2억원 이하)의 경우 9/109, 음식점업(유통업소)에 대해서는 2/102를 적용하고 있음
 - 현재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 역시 업종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음
 -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50%, 음식점업의 경우, 매출액 2억원 초과는 매출

액의 60%, 매출액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70%, 매출액 1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75%를 적용함

- 2024년 1월 1일부터는 법인사업자의 한도율은 매출액의 30%로 낮아지고, 일반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매출액 2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%, 매출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5%를 적용함
-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공제율 3/103, 중고자동차는 10/110을 적용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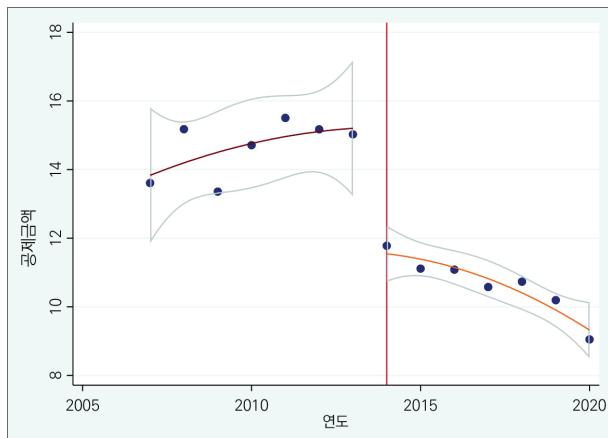
2.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현황

-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연도별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, 2020년 기준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약 6,046억원, 일반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약 2조 568억원임
 - 신고건수당 세액은 2020년 기준, 법인사업자의 경우 약 900만원, 일반사업자의 경우 약 200만원임
-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한도가 적용된 2014년 이후, 법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([그림 1] 참조)
-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금액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뚜렷한 증가 추세이며, 일반사업자는 연도별 편차가 있음
 - 2020년 기준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약 5,400억원, 일반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은 약 4,900억원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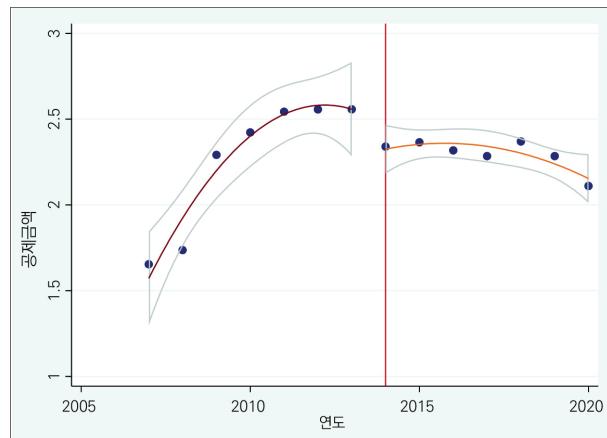
그림 1 의제매입세액 신고건수당 공제 금액 변화

(단위: 백만원)

(a) 법인사업자



(b) 일반사업자



자료: 국세청,『국세통계연보』, 각 연도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

03

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효과

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와 관련한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은 의제매입과 관련한 법 이론의 관점에서의 분석과 공제율 및 공제 한도의 적정성에 관한 것인 반면,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사용하여 제도의 영향을 받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 차이점임

1. 사업자에게 미치는 효과

- 부가가치세 신고 미시자료를 패널자료로 구축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따른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행태를 분석한 결과,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혜용은 사업자들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며, 이에 따라 가격 전가의 정도를 낮춤
 - 가격 전가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사업체의 부가가치율을 사용하여 분석함

- 부가가치율은 매출에서 매입을 차감한 후 매입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함
- 부가가치율이 가격 전가의 정확한 대리변수는 아니지만, 계산된 부가가치율은 실제 부가가치율과 가격전가 정도에 의해 결정됨을 가정하고 분석함
- 이때, 비슷한 조건(비슷한 매입금액, 비슷한 업종 등)의 사업체들을 비교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부가가치율의 관계를 검토하고, 가격 전가 정도를 추정하고자 함
- 가격 전가의 효과는 간이사업자 및 일반사업자에게서 확인되며, 법인사업자의 경우 발견할 수 없음
 - 간이사업자의 경우,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받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약 22~32%p 낮게 나타남
 -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도,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받지 않은 사업자에 비해 약 14%p 낮게 나타남
- 또한,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, 의제매입공제 적

- 용에 따른 가격 전가의 정도가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함
-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 매출 규모 하위 50% 이하의 사업체들 간의 비교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관찰되며,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임
 - 이러한 결과는 최종 소비자와 주로 거래하는 사업체들로 한정하여 분석하여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
 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없었다면, 최종 단계 소비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
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자체의 효과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적용을 받는 사업체에 한정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 도입의 효과를 통계청의 「광업·제조업조사」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
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이미 적용 중인 상황에서 공제 한도의 도입은 사업체에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
 - 공제 한도 도입으로 인해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는 사업자들이 다음 거래 단계로 이 부담을 전가시킴을 확인함
 -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, 한도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이 다음 거래 단계로 부담

- 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전가함
- 한도 도입의 적용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음식료품제조업의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체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더 커질 가능성을 확인하였고,
 - 앞선 가정에 따라 이는 상대적인 전가의 크기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
 - 공제 한도 도입의 효과는 관찰할 수 있었으나, 공제 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제 한도율의 변화에 따른 사업자들의 행태 변화는 추가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움
 -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비교한 결과, 한도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매출과 표 1억원을 기준으로 사업체 간 부가가치율의 큰 변화를 관찰하기는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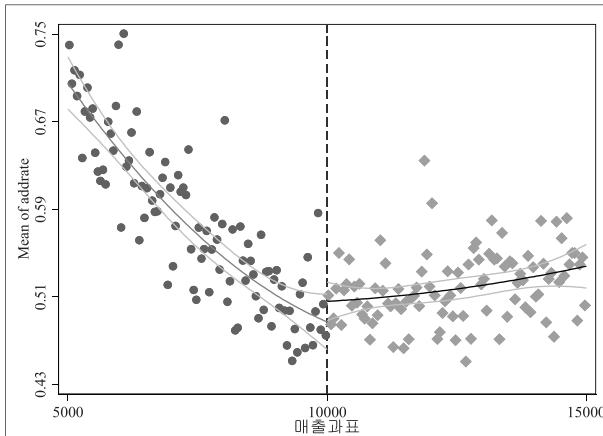
2. 소비자에게 미치는 효과

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소비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며, 이는 간접적으로 앞선 생산자의 가격 전가 행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비자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검토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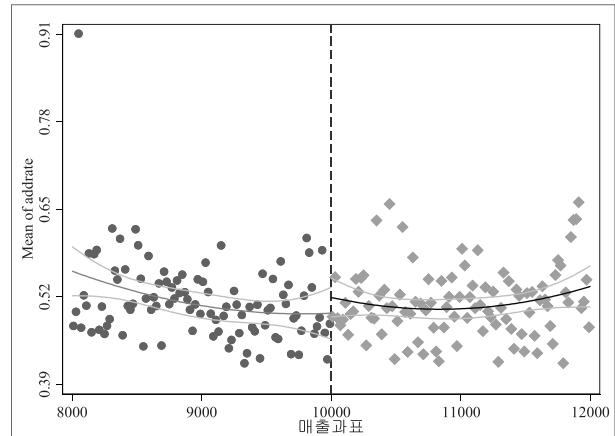
그림 2 음식점업 등의 공제 한도율에 따른 부가가치율 비교

(단위: %, 만원)

(a) 매출과표 5천만~1.5억원



(b) 매출과표 8천만~1.2억원



자료: 국세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

조세재정 Brief

- 「가계동향조사」 자료를 이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,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자들이 떠안게 되는 추가적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경향을 발견함
 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도입 자체는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정도를 낮춰 소비자들에게 혜택으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음
 - 다만,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등의 변화로 인해 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떠안게 되는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, 제도 도입 이후의 변화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것을 확인함
 - 공제 한도의 감소로 사업자들의 비용이 증가할 경우,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 전가가 심해짐을 확인함
 - * 이를 확인하기 위해, 「가계동향조사」의 식료품 비 지출과 외식비 지출을 비교하였는데,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등의 변화가 외식비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 반영함
 - 공제 한도의 증가로 사업자들의 비용이 감소한다 하더라도, 소비자들에 대한 가격 전가는 그 크기가 작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

3. 설문조사 결과

- 실증분석에 더해,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,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로 인한 가격 전가의 정도에 대해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검토함
 -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, 다음 단계의 판매 가격(예를 들면,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음식가격)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약 60%임
 - 0~5% 가격 전가를 고려한 응답자는 30%, 5~10% 가격 전가를 고려한 응답자는 20.9%, 10% 초과하는 가격 전가를 고려한 응답자는 10.4%임
 - 추가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와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가상적인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가상의 판매 가격의 변화를 추정해봄
 - [그림 3]의 (a)는 의제매입세액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자들이 설정하는 가상의 판매 금액을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조사한 것이며,
 - [그림 3]의 (b)는 의제매입세액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들이 설정하는 가상의 판매 금액을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조사한 것임
 - 의제매입세액을 허용하지 않는 (b)의 경우 사업자들이 응답한 판매 금액은 평균적으로 의제매입세액을 허용하는 (a)의 경우에 비해 약 20% 높아, 앞선 설문의 조사 결과보다도 평균적으로는 더 높은 가격 전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

그림 3 가상의 상황에 대한 사업자 설문조사

(a) 의제매입세액 허용

구분	매입(A)	판매(B)	부가가치세 납부
기본 1	1,000	2,000	100원
상황 1	1,300	()	매입세액은 130원
상황 2	1,200	()	매입세액은 120원
상황 3	1,100	()	매입세액은 110원
상황 4	900	()	매입세액은 90원
상황 5	800	()	매입세액은 80원
상황 6	700	()	매입세액은 70원

(b) 의제매입세액 없음

구분	매입(A)	판매(B)	부가가치세 납부
기본 2	1,000	2,000	200원
상황 7	1,300	()	매입세액은 0원
상황 8	1,200	()	매입세액은 0원
상황 9	1,100	()	매입세액은 0원
상황 10	900	()	매입세액은 0원
상황 11	800	()	매입세액은 0원
상황 12	700	()	매입세액은 0원

자료: 정다운·정재호,『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』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22.

04

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

- 본 연구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효과를 부가가치세 신고 미시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전가를 기제로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 의미가 있음
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은 혜택을 입음
 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없다면,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는 사업자들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,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
- 다만,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예외 사항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만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할 것임
 -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세액공제가 아닌 면세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세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금 형태의 제도 운영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들의 가격 전가 정도를 낮게 조정할 수 있다면,
 - 부가가치세제의 예외 사항을 허용하여 세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대신, 중복과세, 소비자 부담 등에 대한 더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임
-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한다면,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단순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분석 결과,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한, 공제율의 조정을 통한 중복 과세 현상의 완화 현상은 관찰되지 않기 때문임
 - 업종별로 공제율의 차등 적용, 공제 한도율의 차등 적용 등의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, 복잡한 세제 운영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공제 한도가 이미 도입된 상황에서 공제 한도율의 조정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음
 - 사업자들이 공제 한도율 변화에 따른 비용 증감에 대칭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임
- 제도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, 제도의 대상 폭을 좁히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 -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,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에 상대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고 있고,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의 후생 증대 역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관찰되기 때문에,
 - 제도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의 과표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집중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

참고문헌

- 정다운·정재호, 『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 방안』, 한국조세재정연구원, 2022.
- 국세청, 『국세통계연보』, 각 연도.



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본 발간물은
친환경 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.

